

## ‘풍선효과·백신부족’ 광주지역도 거리두기 상향하나?

수도권 4단계 여파 광주 연일 두 자릿수 확진  
 휴가·방학철 겹쳐 타 지역 접촉 감염 ‘현실로’  
 백신 수급 불안정 속 미접종 20~30대 대확산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에서 사실상 ‘야간 통행금지’를 골자로 한 새 거리두기 최고 수위(4단계)가 적용되면서 광주지역 방역단계 상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적모임 기준이 4명에서 8명으로 상향된 이후 불과 3주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두자릿 수로 급증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선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9면)** 12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9일 21명, 10일 23명, 11일 14명에 이어 이날 오전 8명 등 나흘새 66명에 이르고 있다. 검사자 수도 지난달 2000여명대에서 9일 7891명, 지난 10일 5135명, 11일 6191명으로 사흘 연속 5000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수도권 대유행과 인도발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광주에서도 연일 두 자릿수 확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휴가와 방학 시기와 겹치면서 타 지역 접촉으로 인한 감염

사태가 크게 늘고 있다. 실제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지역 확진자 94명 중 47.2%가 타 지역 방문과 확진자 접촉 등으로 분석됐다. 범위를 좁혀 8~10일 확진자 48명 중 20명이 타시도 관련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11명이며, 부산 6명, 그외 지역 3명이다. 냉방기 사용으로 인한 자연환기 부족도 잠재적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유흥업소, 골프장, 학교, 공공기관 등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수도권 방역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백신 수급난으로 광주지역 백신 접종 완료율은 30%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확진자 10명 중 4명 꼴로 백신 미접종 연령대인 20~30대인 점도 골칫거리 문제다. 광주시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 방역단계 상

향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중이다. 코로나19 대응 민관공동대책위원들의 개별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실국장단 논의를 거쳐 오는 15일 이후 현재 1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이 이날부터 사회적모임 오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제한하는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반면 광주는 지난 달 18일 사회적모임 허용인원이 종전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 1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시기상 중대 분수령이어서 단계 격상이 이뤄질 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원 제한 등 일부 조항만 수정된 ‘강화된 1단계’가 적용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치구 한 방역담당자는 “광주의 경우 최대 8명이 모일 수 있고 노래방, 술집 등 유흥시설 출입도 자유로워 수도권 등 다른 지역 방문자

가 늘고 있다”며 “느슨한 거리두기를 유지할 경우 지역 내 확산은 순식간에 만큼 시급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최근 일선 초·중·고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해 초등생 자녀들 학교 보내기가 두렵다”며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방학 때 방역수칙을 세부적으로 조정해 9월 전면교과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치구 선별진료소는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시청 선별검사소도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늘렸다”며 “확진자수가 1주일 평균 3일 연속 15명 이상일 경우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어 최근 확진자료를 토대로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선미기자**

### “공직자 소유 농지부터 투기 의혹 조사를”

광주전남농민단체, 도청 앞 기자회견 “자산증식 수단 되선 안돼”



광주전남농민단체협의회가 12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소유 농지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전남 농민단체가 공직자 소유 농지를 대상으로 투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전남농민단체협의회는 12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가 투기와 자산증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발표한 자치단체장·지방의원 농지 소유 현황을 인용하며 “전남도의회 의원 56명 중 62%에 해당하는 35명이 농지를 소유했으며, 1ha 이상의 농지 소유자도 5명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준성 영광군수는 전국 기초지자체장 중 농지 최다 면적 소유자로 이름을 올렸고, 전남도의회 정광호·사순문 의원은 전국 광역의회 의원 중 농지 최다 소유자로 각각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고 했다. 협의회는 “현행 농지법은 ‘농업 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영농 실적은 따지지 않고 영농 계획서만 제출하면 아무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모순투성이 법률이다”며 “농지법이 농지투기 조장법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농지 소유·이용실태 전수 조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영농법인, 농업 회사법인 소유 농지부터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공직자의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농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농지를 투기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삼는 모든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투기 이익은 환수하고 투기 농지는 몰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아지랑이에 흐려보이는 도로’ 전북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12일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에 지열로 인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 ‘곡성 옥과 35.5도’ 광주·전남 전역 폭염특보 강화

이들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광주·전남의 폭염특보가 강화됐다. 광주기상청은 12일 오후 4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나주·곡성에 내리진 폭염주의보를 경보로 격상 발령했다. 이로써 광주와 전남 5개 시·군(나주·화순·담양·구례·곡성)에는 폭염 경보가, 나머지 전남 17개 시·군에는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곡성 옥과 35.5도, 광주 풍암 34.1도, 나주 다도 34도, 순천 황전 33.8도, 담양 33.6도, 광양 32.6도, 광주 32.4도, 영광 32.2도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오는 14일까지 낮 기온이 32도 이상 오르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와 일부 내륙 지역에 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밤 사이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대기 불안정 영향으로 전남 동부 내륙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기동채본부**



**워킹레일**

요양원 061) 395-2580  
 주간보호 061) 394-0123

**Shinsegae 신세계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장성읍 방울샘길 12 (영천리 1493-5)